

# 판 커진 전남광주 통합단체장 선거...공천률 변화 '촉각'

### 광주와 전남 선거구 합쳐져 기존 공천률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워 예비경선 진행 후 권역별 투표·배심원제 투표 등 다양한 방법 논의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 추진에 따라 오는 6월 처음으로 쟁게 될 통합시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공천률 변화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 정태대 대표는 경선 과정에 당원 참여를 늘리는 '당원 주권시대'를 천명했지만, 광주·전남 선거구가 합쳐지면서 기존 공천률을 그대로 적용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당 안팎에서는 예비경선을 진행하고, 권역별 투표와 배심원제 투표 등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민주당 지도부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 관련 법안이 구체화 하면서 당내에서 공천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민주당 공천률을 적용하면 통합시장을 뽑기 위해서는 광주시와 전남도를 대상으로 권리당원 50%와 일반여론조사 50%를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광주시와 전남도의 선거구가 합쳐지면서 상대 선거구에 조직이 전혀 없는 출마자들의 하소연도 잇따르고 있다.

도심과 농촌 지역간 권리당원 숫자와 응답률이 다

르고, 상대 선거구에서 조직을 만들 시간이 촉박한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가령, 광주시를 기반으로 한 출마자는 전남에 자신의 조직이 없어 당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남지역 출신 출마자도 광주시에서 지지층을 형성하기에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과거 경선 통계를 보면 광주지역 권리당원 응답률은 20~40%였지만, 전남 대부분 시·군은 한 자리에 머물고 있다.

또 인구밀도가 높은 광주시와 22개 시·군으로 나눠있는 전남의 권리당원 관리 방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타지역 정치인이 상대 진영에서 지지층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사실상 현역 국회의원의 18명이 포진한 지역위원회회를 누가 더 많이 장악하느냐에 따라 후

보가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 후보 간 합종연횡 등 부작용도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전남지역 A후보와 광주지역 B후보가 서울에서 경선 관련 만남을 가졌고, 다른 C후보와 D후보 진영도 경선 협조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과거 전남의 시지역과 군지역이 합쳐진 선거구에서 시·군의 인구차이도 있겠지만 군지역 후보가 이긴적이 거의 없었다"면서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권리당원 동원 방식도 다르고 응답률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기존 방식으로 공천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최근 민주당은 광주시·전주시 등 전국 3개 지역에서 예비경선을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통합시장 공천률도 조만간 구체화

할 전망이다.

현재 당 내에서는 예비경선과 함께 광주·전남을 3~4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경선을 진행하면서 흥행을 이끄는 방안도 논의되고, 다수 후보자가 경선을 치르는 만큼 선출도 투표도 거론되고 있다.

또 권리당원과 일반여론조사 50:50으로는 첫 통합시장을 선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배심원제 투표도 조심스럽게 제안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한 관계자는 "첫 통합시장 경선이기 때문에 당원과 지역민의 뜻이 고스란히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면서 "통합시장에 맞는 사람이 선출될 수 있는 가장 민주적인 방법을 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29일 오후 장성군 장성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장성군 공청회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김한중 장성군수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행정 통합의 의지가 담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장성, AI와 첨단 산업의 중심 '호남의 강남'으로"

### 장성군서 시·군 통합 상생토크

광주시와 전남도가 추진 중인 행정통합이 단순한 구역 개편을 넘어 AI 산업과 교육이 결합한 미래형 거점 도시로의 도약을 예고하고 나섰다.

특히 광주와 인접한 장성군은 통합 이후 첨단 3지구를 중심으로 한 산업적 수혜와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호남의 강남'으로 거듭나겠다는 청사진을 공유했다.

29일 장성군청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전남 시·군 통합 상생토크'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금의 시·도지사의 결단과 중앙정부의 지원 약속이 맞물린 30년 만의 최적기"라며 "통합이 이뤄지면 장성군은 광주와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여 가장 큰 발전을 이룰 지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강 시장을 비롯해 김한중 장성군수,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 최치국 광주연구원장 등 주

요 인사와 5만 장성군민을 대표하는 사회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강 시장은 장성군 발전을 위한 6대 핵심 정책을 발표하며 통합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첨단 3지구와 연계한 AI 데이터 특구 지정, 30분 대도시 생활권 구축을 위한 광역 교통망 확충, 광주형 통합돌봄 서비스 확대, 영농형 태양광을 통한 햇빛연금 도입, 심뇌혈관센터 중심의 의료 인프라 강화 등이다.

김한중 장성군수 역시 "장성은 광주와 인접해 통합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이라며 "과인 데이터센터 착공과 첨단 3지구 조성이 마무리 되면 장성은 AI와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통합을 통해 재정적 지원과 산업적 시너지가 확보된다면 정주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청년들이 돌아오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 분야에서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컸다. 이정선 교육감은 "행정통합의 절반은 교육 통합"이라며 "광주의 진학 노하우와 장성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가 결합하면 지역 아이들이 세계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통합 시 지원될 교육 예산을 통해 교실 환경 개선과 복지 확대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러진 질의응답에서는 실질적인 지역 현안에 대한 군민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군민들은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권한 확대와 보상 체계의 불균형 해소,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소통 강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와 장성군 관계자들은 특별법을 통한 규제 완화와 과학적인 검증을 통한 주민 불만 해소를 약속하며 상생의 의지를 다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尹관저에 골프연습장 불법 설치"

### 감사원 확인, 공사명 '초소 조성' 문서 허위 작성

### 히노키 육조·켓타워 등도 확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머물던 한남동 관저에 설치된 실내 골프 연습시설이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의 지휘에 따라 관계 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불법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용현 전 처장은 대통령 관저 이전을 준비하던 2022년 5월 김종철 전 차장을 비롯한 경호처 직원 10여명을 관저로 소집해 골프 연습시설의 조성을 지시했다.

이후 김 전 처장은 직원들에게 정문 초소와 보안 시설(골프 연습시설) 조성을 경호처에서 진행하라고 다시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호처는 현대건설에 먼저 공사를 진행하게 한 뒤 같은 해 7월에야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

공사대금 1억3500만원은 준공 이후인 8월에 지급됐는데 전체 대금 중 골프 연습시설 관련은 1억 400만원이었다.

골프 연습시설은 기존 건물에 69.5㎡를 증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를 위해서는 국유재산법상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경호처는 공사 착수 및 준공 시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김 전 처장은 또 공사 진행 중에 관저를 방문해 '외부에서 (시설이) 보이지 않게 나무를 심어라' 등 구체적 지시도 했다.

경호처가 골프 연습시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피하려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정황도 포착됐다.

김 전 처장은 한 간부에게 골프 연습시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지시했고 이 간부는 보고를 거쳐 공사명은 '초소 조성공사', 공사 내용은 '근무차 대기시설'인 것처럼 사실과 다른 공사 집행계획 문건을 작성했다.

이에 따라 서류만으로는 국회와 외부 기관 등에서 관저에 골프 연습시설이 설치된 사실을 알 수 없게 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심지어 대통령실 역시 직접 관저 내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로 인해 시설의 존재를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한편 감사원은 현장 조사 과정에서 기간 논란이 됐던 관저의 켓타워, 히노키 육조, 다다미방 관련 서류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켓타워 금액은 173만원, 히노키 육조 1484만원, 다다미는 336만원으로 나타났다.

켓타워의 경우 관저 침실 인근에 마련된 '반려묘실'이라는 고양이 전용 공간에 설치돼 있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이 밖에 감사원은 대통령 관저 이전의 결정 경위 등도 확인했으나 특별히 확인된 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천공 등 역술인 개입설에 대해서는 국회의 감사 요구사항을 벗어난 부분이고, 이를 파악해야 할 특별한 정황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74** 광주일보 74년 - 유튜브 3천만뷰 돌파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